



환경경제학

4차시

1. 한국 환경정책의 전개과정

- 한 국가의 환경정책은 그 나라의 경제발전 및 산업화 과정 등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며 형성됨
- 한국은 불과 40여 년 동안 전통적 농업국가에서 고도의 산업화 국가로 전환되었으며, 한국의 환경문제 역시 단기간 동안 급격한 질적 변화가 이루어짐

1.1. 환경정책의 태동기(1953년 ~ 1979년)

1) 전후복구기(1953~1959)

- ① 산업발달수준이 낮아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하지 않음
- ② 다만 일제수탈과 전쟁, 가정용 연료소비로 인해 산림이 황폐화되면서 토양 침식문제 등이 부분적으로 거론됨
- ③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지 않아 환경정책이나 환경정책기구 형성 되지 않았으며, 조직적인 식목이나 산림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음
- ④ 외국의 경우 40~50년대에 LA, 런던스모그 등으로 환경의식이 고조되기 시작함
 - 미국의 경우 수질오염관리법, 대기오염관리법을 제정하는 등 환경정책의 법제화에 착수함

2) 경제개발시대(1960년~1979년)

- ① 1960년대의 제1, 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에는 기간산업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추진되어 1인당 소득의 증대와 인구와 산업의 도시집중화가 발생함
 - 산업오염은 크게 발생하지 않았으나 비료산업 육성에 따른 농업용 화학재의 증투로 인해 쌀에 잔류된 수은 등이 검출되기 시작함. 산업공단을 중심으로 수질오염이 나타나기 시작함
- ② 1970년대의 제3,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통해 일부 지역에 대규모 공업단지가 들어서고, 경부, 호남,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됨. 이로 인해 인구의 도시 집중이

심해지고 국민경제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급속히 늘어남

- 주요 하천의 오염도가 심화되고, 서울의 대기오염이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치를 넘어서는 일이 잦아짐
- 폐기물의 경우 플라스틱이나 폐휴지, 공병 등의 수거재활용률이 높아 큰 환경문제가 되지 않았고, 연탄재가 폐기물 쓰레기의 큰 부분을 차지함

③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보건행정의 일환으로 이루어 졌으며, 미온적이었음

- 1961년의 『오물청소법』
- 1963년의 『독물극물에관한법률』
- 1963년에 『공해방지법』이 제정되었으나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환경정책을 집행할 기관조차도 존재하지 않았음
- 1967년에 시행규칙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시행이 가능해졌으며, 1971년에는 개정되어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허가제도 등의 개념이 도입되었다가, 1977년에는 폐지되고 『환경보전법』으로 대체됨
- 최초의 환경전담부서로 보건사회부 환경위생과 공해계가 1967년에 신설됨. 1973년에 과단위, 1977년에 국단위로 승격됨
- 1978년에는 국립환경연구소를 설치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와 공무원교육을 담당하게 함

1.2. 환경정책의 형성기(1980년대)

1) 환경정책의 형성기(1980년대)

- ①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발생하고,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화가 진행됨
- 지속적인 수질, 대기오염이 발생하고 산성비 문제가 심각해짐
-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높은 속도로 증가하여, 수질오염과 폐기물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폐수종말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같은 환경 기초시설 투자가 확대됨

② 1980년 환경청이 보건사회부 외청으로 설립되어 본격적인 환경정책의 수행이 가능하게 됨

- 1986년 6개의 지방환경지청, 1987년 환경관리공단이 각각 설립됨
- 1977년 공해방지법을 대체하여 제정된 『환경보전법』은 환경기준의 설정,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시행, 특별대책지역 지정, 환경오염도의 상시 측정, 환경오염방지비용의 부담제 등을 명시하여 보다 적극적인 환경보전을 추구할 수 있게 함
- 이후 개정을 통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배출부과금제, 자동차오염 규제 등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를 민간사업에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함

1.3. 환경정책의 발전기[1990년대 이후]

1) 환경정책의 발전기(1990년대 이후)

- ① 리우환경선언, 교토의정서 등으로 한국 역시 이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게 됨
- ② 또한 지방자치제도로인해 환경문제, 시설유치 등에 지역 간의 갈등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위한 환경정책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 1990년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된 후 1994년 환경부로 전환됨
- 1991년에는 환경분쟁의 중재를 위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가 설치됨
- 1997년에는 기존의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이 확대 개편되어 환경정책관련 연구업무와 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적 검토를 전담하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설립됨
- 2010년에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신설됨

2. 한국 환경정책의 특징

2.1. 한국 환경법의 변천과정

1) 한국 환경법의 변천과정

- ① 1970년대까지는 본격적인 환경정책이 시행되지 않았으며, 환경법의 입법도 이루어지지 않음
- ② 1977년 『환경보전법』에 의해 비로소 제대로 된 환경정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
- 『환경보전법』은 1990년대에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분쟁조정법』으로 분리됨
- ③ 2000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됨
- ④ 2002년에는 유역단위의 수질관리를 위해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 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이 제정 공포됨
- ⑤ 2003년에는 수도권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되어, 대기오염원이 총량규제, 배출권거래제, 저공해 자동차 보급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 짐

2) 환경부 및 타부처 소관 환경법

- ① 2012년 기준으로 환경부가 직접 관장하는 환경법은 50여 개에 이름

〈표 1〉 환경부가 직접 관장하는 환경법의 변천과정(2012년 기준)

1960(6)	1970~1980(9)	1990 ~ 2012(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해방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전법 · 자연공원법 · 환경오염방지사업 단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정책기본법 · 대기환경보전법 · 지속가능발전법 · 환경교육진흥법 · 환경보건법 ·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 관리법 · 소음·진동관리법 · 악취방지법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자연환경보전법 ·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 · 환경분쟁조정법 ·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공동입법) ·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 석면피해구제법 · 석면안전관리법 · 자연공원법 ·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 습지보전법(공동입법) · 환경영향평가법 · 토양환경보전법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공동입법) · 문화유산과자연환경자산에관한국민신탁법(공동입법) ·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지원특별법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환경관리공단법 · 환경개선특별회계법 폐지('12.7.22) ·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수보호및수렵 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 · 오물 청소법 · 하수도법 · 수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관리법 · 합성수지 폐기물 처리사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공동입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공동입법)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한국환경자원공사법 폐지('09.12.31) · 하수도법 · 수도법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먹는물 관리법
---	--	--

출처: 『2012년 환경백서』, pp. 766-767.

② 환경부 외의 15개 정도의 타부서가 소관하는 환경법도 60여개에 달함

〈표 2〉 환경부 외 부처소관 환경관련 법령

부문	법령명
대기오염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손해배상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에너지법, 건설기계관리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 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수질오염	해양환경관리법, 지하수법, 하천법, 공유수면 매립법, 골재채취법, 공유수면 관리법, 온천법, 댐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소하천 정비법
소음	도로교통법, 학교보건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반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도시공원및녹지등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익 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 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 지원등에관한법률,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 동서남해안및내륙권 발전특별법, 주택법
농업	농약관리법, 농어업인의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농 어촌정비법, 농지법, 동물보호법, 식물방역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축산	축산법, 낙농진흥법, 초지법
수산·항만	수산업법, 어촌·어항법, 항만법
산림	산림기본법, 사방사업법, 산지관리법
기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문화재보호법,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 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광산보안법, 관광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광업법, 내수면어업법, 자연재해대책법, 경범죄처벌법, 대외무역법 등

자료: 『2012년 환경백서』, p.779.

- ③ 바람직한 환경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관장하는 환경 법률과 여타 부서가 관장하는 환경관련 법률 간의 상충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2.2. 한국 환경정책의 기구 및 예산상의 구조

1) 한국 환경정책 담당 기구

- ① 현재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정부기구: 환경부 본청 외에도 많은 조직이 있음
- 환경관련 법률이 환경부 뿐 아니라 여타 부서에 의해서도 관장되고 있듯이, 환경관련

업무 역시 환경부 외의 여타 부서에 의해서도 행해지고 있음

- ② 환경 정책 가운데 환경부 보다 상위의 기구에서 범부처적으로 다루어지는 것도 있음
- 예: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③ 환경부의 소속기관으로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및 8개 지방환경관서를 두고 있음
- ④ 또한 환경정책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원으로 설치되어 있음
- ⑤ 환경부는 환경관련법규의 제정과 규제기준의 설정 등과 같은 환경정책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이를 집행하는 책임은 각 지방환경관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

2) 환경예산 구성 및 지출현황

- ① 환경관련 예산은 1995년 도입된 환경개선특별회계를 통해 마련되고 그 밖의 몇 가지 추가 특별회계가 환경예산에 포함됨

〈표 3〉 환경예산의구성

단위: 억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환경개선특별회계	30,759	34,963	38,798	41,881	42,857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006	1,128	1,151	909	1,035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3,749	4,191	4,883	4,908	4,777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80	1,228
합계	35,514	40,282	44,832	47,778	48,897

자료: 『2012년 환경백서』, p. 752.

- ② 환경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은 자체세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구성되며, 자체 세입은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재활용부과금, 폐기물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의 6가지 부담금과 융자회수금

수입 및 기타 세입 등으로 구성됨

<표 4>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 구성

단위: 백만원

구 분	2010	2011	2012
환경개선부담금	648,258	662,738	682,387
배출부과금	11,849	12,363	12,817
재활용부과금	5,557	6,635	5,113
폐기물부담금	60,514	87,006	90,023
수질개선부담금	14,310	13,578	21,741
생태계보전협력금	101,929	61,509	199,121
용자회수원리금	335,243	304,451	379,060
수입대체경비	755	1,729	930
기타	138,226	86,593	90,375
전년도이월금	12,391	34,092	0
(자체수입합계)	1,316,660	1,270,694	1,481,567
(일반회계전입금)	2,646,309	3,126,297	2,882,392
합계	3,962,969	4,396,991	4,363,959

주: 2010년과 2011년은 실적치이고 2012년은 예산임

자료: 『2012년 환경백서』, p. 751.

2.3. 한국 환경정책의 구조

- 제도적·행정적 규제를 통해 실현되는 환경정책은 크게 환경기준을 사용하는
직접규제와 배출부과금제나 배출권거래제 등과 같은 경제적 유인을 사용하는 제도로
양분할 수 있음

1) 직접규제

- ① 직접규제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환경질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당국이
오염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위를 구체적인 법률로 정하고, 사법권, 경찰력, 벌금,
행정조치 등과 같은 수단을 동원하여 오염자가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는 환경정책을
의미함

- ② 직접규제는 효율성이나 기술혁신을 자극하는 측면에서 볼 때 단점이 있으나, 집행하기 용이하고 단기간에 걸쳐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따라서 한국 역시 다른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직접규제가 환경정책으로서 우선적으로 사용되어 옴
 -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직접규제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이고 신축적인 **경제적 유인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③ 한국에서의 직접규제는 오염도기준, 배출기준, 기술기준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 ④ **기술기준**은 주로 심각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 적용되는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대한 기준을 의미함
 - 예: 유해화학물질을 제조보관판매하는 업소의 경우 제조시설, 보관시설, 운반시설 등에 특정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 기술기준 위주의 직접규제들 중 많은 수가 오염도기준이나 배출기준 준수를 위해 적용됨
- ⑤ 환경부는 또한 수질, 대기, 소음진동, 토양 등에 관한 **오염도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음(〈표 6〉)
- ⑥ **배출허용기준** 위반 시 오염자는 개선명령, 조업중지, 사용중지, 허가취소, 벌금이나 징역형과 같은 제재를 받게 됨

〈표 5〉 직접규제

구 분	규제내용	비 고
대 기	배출시설 설치 허가제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시설이나 특별대책지역 시설
	방지시설 설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가 되게 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	적산전력계와 굴뚝자동측정기기
	자가측정	자가측정 혹은 대행업체 위탁
	연료사용 규제	
	휘발성 유기화합물 규제	특별대책지역이나 대기환경규제지역
수 질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제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시설,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시설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 규제	
소음 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제한	의료법, 도서관법, 교육관련법, 주택법 등에서 대상 시설 지정
악취	악취 배출시설 설치신고	환경부령으로 대상 시설 지정
휘발성유 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석유정제시설, 석유화학제품시설, 저유소 및 주유소, 세탁시설 등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	
잔류성유 기오염물 질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알드린, 엔드린, 디엘드린, 톡사펜 등 12개 물질
	자가 측정 및 주변영향 조사	
비점오염 원	오염원 설치 신고, 저감시설 설치·운영, 모니터링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 평가대상 사업
개인하수 처리시설	설치 신고	오수발생량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혹은 정화조 설치
가축분뇨	분뇨 배출·처리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축종별·지역별로 특정 면적 이상의 시설이 대상
폐기물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신고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해 대상 지정

자료: 환경부(2009), 『수요자관점의 환경규제편람』.

〈표 6〉 직접규제오염도기준 및 배출기준

구 분	환경기준(오염도기준 및 배출기준)	근거법령
수질	수질환경기준(하천, 호수, 지하수, 해역), 수질규제기준(폐수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먹는물 수질기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하수도법,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대기	대기환경기준, 대기배출허용기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	소음 환경기준, 공장소음 진동 배출허용기준, 자동차의 소음 허용기준(제작자동차, 운행자동차, 건설 및 생활소음 진동규제 기준)	소음진동규제법
악취	악취관리지역안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	악취방지법
토양보전 및 유독물 관리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 농수산물 재배를 제한할 수 있는 오염기준, 유독물 및 관찰물질의 지정기준	토양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자료: 환경부(2009), 『수요자관점의 환경규제편람』과 각년도 『환경백서』

2) 경제적 유인제도

- ① 경제적 유인을 사용하는 환경정책은 **가격변화 정책**과 **수량정책**이 있음
 - 가격변화 정책의 예: 배출부과금제, 배출보조금제, 제품부과금, 폐기물예치금제
 - 수량정책의 예: 배출권거래제
- ②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요 경제적 유인 제도는 각종 부담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이 제도들은 오염물질 배출행위의 비용을 늘려 저감 행위를 유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배출부과금제와 유사함
 - 징수한 부과금은 가장 중요한 환경예산 세입원임

- ③ 2006년 현재 총 24종의 환경관련 부과금제가 운영되고 있고, 환경부는 이를 목적에 따라 <표 7>과 같이 5가지로 분류하고 있음

<표 7> 환경관련 부담금제도

유 형	환경 관련 부담금제
오염물질 배출억제	배출부과금(대기,수질,축산), 환경개선부담금(경유차, 시설물), 협의기준초과부담금(대기,수질), 총량초과부과금(낙동강 등 3대강 유역)
환경자원의 보전	수질개선부담금(지하수), 물이용부담금(한강 등 4대강 유역), 생태계보전협력금
폐기물배출저감 및 재활용촉진	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과금
예치금	폐기물처리 이행보증금,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원상회복예치금
사업비용 부담금	원인자부담금(수도,하수도), 손피자부담금(수도,하수도),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

자료: 『2006년 환경백서』

- ④ 시행되고 있는 환경관련 부담금제도 중 몇 가지를 상세히 살펴보고자 함

가. 환경개선부담금

- a.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수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해 부과됨
 - 상품의 소비유통과정과 관련된 건물이나 기타 시설물 가운데 환경오염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시설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됨(농림지역 제외)
 -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서도 부담금이 부과됨
 - b. 시설물에 의한 수질 및 대기오염에 대해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량을 계산하여 이에 비례하게 산정**됨
 -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용수나 연료사용량과 이들의 오염유발정도, 지역별 특성 차이 등을 감안하여 산정됨
- (수질환경개선부담금 = 용수사용량×단위당 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지역계수)

(대기환경개선부담금 = 연료사용량×단위당 부과금액×연료계수×지역계수)

- 경유자동차 소유주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자동차개선부담금 = 대당 기본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으로 하여금 자신이 유발한 오염피해에 비례하는 정도의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여 **외부효과의 내부화**를 기하는 정책임
-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비의 지원용자, 저공해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비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에 사용됨
- 환경개선부담금제는 여러 경제적 유인제도 중 배출부과금제와 유사하며, 그중에서도 **구획배출부과금제**에 가까운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수질오염물질이나 대기오염물질의 총배출량에 비례하게 산정될 뿐 아니라, 오염물질의 **지역적 이질성까지도 고려**하여 산정됨

나. 배출부과금

- 환경정책 중 배출부과금제라는 명칭을 지닌 정책은 전통적으로 환경경제학에서 배출부과금제라 부르는 정책과는 차이가 있음
 - 환경경제학에서 배출부과금제란 배출량 단위당 특정금액을 오염원에게 부과하는 정책을 의미함. 이 경우 오염원의 배출량과 상관없이 동일한 부과금이 단위 배출량에 대해 적용됨
 - 그러나 한국의 배출부과금은 기본부과금과 초과부과금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본부과금은 오염원이 배출허용기준 이내의 배출량을 배출할 경우에 적용되는 부과금이며, 오염물질 kg당 부과금액, 농도별부과계수, 연도별부과금 산정지수, 지역별부과계수, 사업장별 부과계수(수질) 등을 적용하여 산정함
 - 초과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 초과배출량에 오염물질 kg당 부과금액, 초과율별부과계수, 위반횟수별부과계수, 연도별부과금산정지수, 지역별부과계수 등을 곱하여 산정함
- 배출부과금은 환경개선부과금제와는 달리 특정 규모이상의 모든 시설물에 대해 징수되는 것이 아니라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에 따라 징수대상이 결정**됨

- 징수대상 오염물질은 대기분야, 수질분야, 축산폐수분야로 나뉨
- 수질분야 초과부과금 징수대상은 BOD 또는 COD, SS 및 카드뮴 등 19종, 기본부과금 징수대상은 BOD 또는 COD, SS임
- 대기분야 초과부과금 징수대상은 먼지, SO₂,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10종, 기본부과금 징수대상은 먼지와 SO₂임
- c. 전통적으로 환경경제학에서 배출부과금제라 지칭되는 정책은 배출량에 관계없이 단위당 동일한 금액의 부과금을 징수하고 배출량은 전적으로 오염원이 결정하도록 하는 정책임
- d. 반면 **한국의 배출부과금제도는 전통적 의미의 배출부과금제와 배출기준을 설정하는 직접규제정책이 결합된 형태를 가짐**
 - 이 제도는 정부가 미리 정한 배출허용기준 이내에서는 비교적 낮은 부과금률을 적용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원에 대해서는 초과분에 대해 더 높은 부과금률을 적용하여 정부가 정한 배출허용기준의 준수를 유도하는 정책임

다. 재활용부과금

- a. 재활용부과금의 일환으로 1992년부터 폐기물예치금제가 시행되어 왔으나 2002년 『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이 제도가 폐지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가 새로 도입되었음
- 폐기물예치금제도는 유리병, 캔과 같이 재활용 가능한 물질을 이용하여 제작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제품판매 시 특정 금액을 예치하게 한 뒤, 이들 물질을 수거하여 재활용할 경우 예치금을 반환해주는 제도임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부과금을 부여함으로써 제품의 설계생산단계부터 폐기물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제도임

라. 폐기물부담금

- a.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 1993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제품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회수재활용이 불가능한 오염유발 용기를 사용할 경우 부과되는 금액임
- b. 제품생산이 유발하는 사회적 피해를 제품가격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임
- c. 상품세 혹은 제품부과금과 유사함
- d. 담배, 1회용기저귀 등에 부과됨

마. 수질개선부담금

- a. 수질개선부담금은 『먹는물관리법』에 의해 먹는 샘물을 개발하여 이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먹는 샘물을 수입·판매하는 업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임
 - 특정 수준 이상의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청량음료나 주류 등과 같은 제품을 판매할 경우 제품의 판매가격에서 원가의 특정 비율만큼을 수질개선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 b. 징수된 부담금은 먹는 물의 수질개선사업, 수질검사, 지하수 자원의 개발, 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기초 조사, 지하수 자원의 복구사업 등을 위해 사용됨